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13’
“탄소중립 시대, 미래 자동차로 전환 가속화할 것”
전기차 충전인프라 · 보조금 확대 공약 제시

- 증가하는 전기차 수요에 맞춘 공급 확대 위해, 충전인프라 확충과 보조금 확대는 필수
- 이재명 후보, “탄소중립 시대에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 자동차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13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전기차 충전인프라 및 보조금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춘 미래 자동차로의 전환을 가속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후보는 “자동차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만큼, 탄소중립 시대에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 자동차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기차 보조금 확대와 함께 급속 및 초고속 전기차 충전을 전국 주요 도로와 고속도로에 촘촘히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2월에 발표한 제4차 친환경 자동차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전기차를 30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목표를 상향하면서 보급계획을 362만대로 확대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올해 보조금 지급 공고대수는 89,533대(11월 21일 기준)이지만 각 지자체를 통해 접수된 물량의 총합은 100,004대로 공급 대비 전기차 수요는 1만대 이상 많고, 다양한 전기차 모델이 출시되면서 향후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 자동차 제조사들은 생산능력이 있음에도 정부의 연간 보조금 총액에 맞춰 생산

량을 조절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전기차 보조금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급을 늘리면 더 많은 구매자들이 혜택을 볼 뿐만 아니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차량 가격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 전기차 정비업,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등 관련 산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과 산업경쟁력이 강화되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수 있고, 온실가스과 미세먼지 저감으로 국민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도 자국의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산 부품과 배터리를 사용한 차량에 보조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어, 앞으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2021년 10월 말 기준 전기차는 21만 8,000대, 급속충전기는 14,000기, 초고속충전기는 50기가 보급된 상태이다. (끝)

담당자 : 정책본부 정책분석팀 김세호 팀장(010-7770-9132)

[참고자료]

<전기자동차 보조금 공고대수 및 접수현황>

연도	2020년		2021년	
지자체명	공고대수	접수대수	공고대수	접수대수
서울	6,522	7,090	17,751	19,566
부산	1,621	1,874	5,890	6,652
대구	1,678	1,847	4,018	4,937
인천	2,127	2,260	5,591	6,667
광주	683	692	1,926	1,800
대전	1,893	1,964	3,774	3,938
울산	804	818	874	1,050
세종	100	109	400	558
경기	7,124	7,648	16,578	19,143
강원	1,678	1,618	3,850	3,510
충북	1,042	1,872	4,124	4,422
충남	2,621	2,801	4,351	5,066
전북	1,304	1,988	3,629	4,908
전남	1,874	1,836	2,409	2,908
경북	3,071	2,594	4,090	4,023
경남	2,446	2,500	5,567	5,712
제주	3,601	3,919	4,711	5,144
합계	40,189	43,430	89,533	100,004

자료: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www.ev.or.kr/portal/evcar>), 2021.11.21.기준

□ 전기차 보조금 확대 필요성

-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은 필수적이며,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
 - 정부는 그린뉴딜 10대 목표과제 중 하나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선정
 - '21.10월말 기준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는 21만 8,000대 수준
 - '21.10월말 급속충전기는 14,000기, 초고속 충전기 50기이며, '22년 예산안 기준으로 급속은 300기, 초고속 900기 설치 예정
- 2030 NDC 상향에 전기차 보급계획 21% 확대
 - 「제4차 친환경자동차보급계획」에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계획은 300만대
 - (보급목표 상향) 정부가 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로 상향하면서 2030년 기준 전기차 300만대에서 362만대로 전기차 보급 목표를 21% 상향

- (해외동향)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은 자국의 전기차 산업 생태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수요 우선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정책 확대
- 독일 : 2019년, 2020년 두차례 보조금 증액
 - 일본 : 정부 80만엔(약 830만원), 지자체 40만엔(약 415만원)까지 보조금 증액(안) 추진 중
 - 미국 : 바이든 정부, 공격적으로 친환경차 보급 정책 펼치고 있음. 연방정부가 세제 혜택 형태로 7,500달러(약 825만원), 각 주별로 최대 3,000달러(약 330만원) 보조금 지급
- 미국과 중국은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보조금 차별 적용
- * (미국) 바이든 대통령, 연방정부 물품을 조달시 미국산 우선으로 하는 '바이 아메리칸 (Buy American)' 행정명령 서명,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44만대 공용차량 전기차 전환 선언, 해당 전기차는 미국에서 생산되고, 미국산 부품 50% 사용 조건 제시
 - ** (중국) 자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거나 세금 할인 혜택 부여